

방위비분담 이면합의 의혹... “소지 제공”

(9차 한·미)

외교부, “예외적 현금지원 문안 합의 국회 보고 안해”... 강경화, “(이행약정 관련) 기록이 없다”

외교부는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에 이면합의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9차 협정 비준동의 요청 과정에서 ‘예외적 현금지원’ 합의 부분이 고의로 누락됐고, 일종의 ‘이면합의’를 은폐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의부 위원까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9차 협정 결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끝에 “협정 타결 시점에 예외적인 현금 문안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예외적 현금지원 문제는 8차 협상 당시에도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갔고, 9차에서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서도 “이것을 이면합의로 불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제3자 시각에서 볼 때 소지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건설원칙에 대한 교환문안과 제도개선에 대한 교환각서에 합의하고, 국회 비준동의 때 2개 교환각서는 포함시켜 올렸다. ‘예외적 현금 지원’ 문제는 2014년 1월에 문안이 합의됐음에도 협정 본문과 교환각서가 아닌 이행약정에 넣고, 그해 4월 비준동의 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예외적 현금 지원” 대상이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민감특수정보시설(SCIF)’ 건설 비용으로, 국회 비준동의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 하에 비준동의 대상이 아닌 ‘이행약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총력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와 군산지역 지원 및 경제활성화 방안을 위해 전북도 지휘부가 서울 중 앙부처와 군산 산단 등을 방문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1일 송하진 도지사가 서울 정부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고형권 제1차관을 만나 군산 근로자 및 협력업체에 대한 세금 면제 등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정’에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8년도 업무보고에서 “당시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이행약정 관련) 기록이 없다”며 “어떤 논의를 거쳐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설명) 어렵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SCIF 시설 추가

현금지급 문제가 국회 비준동의의 사안이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당시 안보관계장관회의에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홍준 청와대 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TF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9차 협정 당시 협상 대표였던 황준국 주영국대사는 TF 조사에서 8차 때 예외적 현금지원 조항이 있었고, 9차의 경우 ‘군사상 필요’에 의해 가용현금이 부족할 때 한미당국이 합의에 의해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개선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공무원 연장연가 ‘최소 10일’ 의무화 추진

정부가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연간최소 10일 이상 연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연가일수를 규정한 ‘권장연가일수’를 부처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미사용 연가를 이월·저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가저축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통해 초과근무를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신부의 경우 접기간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인사처 관계자는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확산시켜겠다”며 “근무혁신이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민주당, 성폭력·성매매시 지방선거 ‘공천배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보의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증위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해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한다. 또 성폭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로 배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죄와 청소년 운전은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경우 2001년부터 총 3회 이상시,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시 부적격 판정을 하기로 했다. 이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된다.

이외에도 ▲당 윤리위에서 제명된 자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자(제명 5년, 당원자격정지 3년 이내) ▲5년 내 경선 불복 경력이 있는 경우도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성범죄와 관련해 아주 매우 단호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국가유공자 심사에 ‘국민배심원단’ 시범 실시

국가유공자 심사에 ‘국민배심원단’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국가보훈처는 21일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유공자를 심사하는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배심원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한 제도로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한다.

보훈처는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문화·예술 ▲종교 ▲교육 ▲경제·시민단체 ▲주부·근로자·대학생 ▲택시·지역업 등 5개 모집부문에서 4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뉴시스

행안부·과기부 28일

세종시 이전 공청회

행정안전부는 22~28일까지 행안부, 과기정통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전자공청회를 실시한다.

전자공청회는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 확인이 가능하며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청회는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정부의 이전계획 변경(안) 설명, 관계전문가 지정토론, 방청객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 참석을 위한 별도 사전신청절차는 없다. 행사 당일 신분증 소지자에 한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공명선거대책추진단’ 지방선거일까지 운영

행안부-자치단체 합동감찰반 편성·운영...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 등

행정안전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해 6월13일 선거일까지 운영한다.

공명선거대책추진단(단장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21일 첫 회의를 열어 공명선거와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방지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행안부-자치단체 합동감찰반을 편성·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비리를 인터넷(모바일)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를 지난 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선관위·경찰청에 이첩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 설치된 ‘불법관행해소 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무원단체의 특정정당·정책·후보 지지 또는 비방행위, 행사개회·후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뉴시스

자치단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해 신속집행과 관련 없는 예산을 집중 관리하고,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원봉사단체·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의 선거 중립도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연찬회·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전국선거당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등 법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